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이양 규제합리화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추진부서 | 경기도 도시재생과 ☎ 031-8008-5574

개선배경



- 도시재생법에 따라 결정된 도시재생사업 변경을 위해서는 최초 결정과 동일한 절차(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위·지방위심의등)를 거쳐 국토부가 결정
 - 법 개정('19.8.27.)으로 경미한 변경은 행정절차가 생략되었으나, 국가지원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토부 결정절차* 이행
 * 도시재생지원기구(HUG) 검토 및 국토부(도시재생과) 사전협의 등
-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권한 이양 필요
 ※ 경미한 변경 승인, 약 1년 소요[수원(세류) 248일, 양주(덕정) 379일 등]

개선내용



개선 전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지원 사항 국토부 결정

경미한 변경 처리에 1년 이상 소요
 ※ 수원(세류) 248일, 양주(덕정) 379일 소요

개선 후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지원 사항 시·도 결정

경미한 변경 처리에 최대 1개월 소요
 ※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경기 더드림 재생)
 계획 변경 사례(2주~1개월 소요)

추진과정



- (‘24.03.13.) 지방시대위원회 권한이양 전문위원회 1차 심의 ⇒ ‘계속심의’ 의결
- (‘24.04.12.) 지방시대위원회 권한이양 전문위원회 2차 재심의 ⇒ ‘계속심의’ 의결
- (‘24.05.24.) 지방시대위원회 권한이양 전문위원회 3차 재심의 ⇒ ‘지방이양’ 의결
- (‘24.07.22.)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회 심의 ⇒ ‘지방이양’ 의결
- (‘24.07.29.)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 심의 ⇒ ‘지방이양’ 의결
- (‘24.07.31.) 언론홍보 추진
- (‘24.08.23.) 지방시대위원회 결정사항,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 건의

지법위, 전문위·분과위·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반대 의견에 객관적·합리적 근거와 설명으로 위원회 설득

보조금의 압축적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수단으로
종합적 검토·승인
필요 입장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사항
교육권한

- ① 법령개정 취지
- ② 중앙 관리 한계
- ③ 시도 역량 증진
- ④ 정부 로드맵
- ⑤ 유사사업 사례
- ⑥ 사무관리 체계

- ① '이양'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법령개정 취지에 부합
- ② 국토부, 전국 611곳 사업관리 한계(주민의견 제기 반영 어려움)
- ③ 시도별 지난 10년간 경험 업무역량 증진에 확보
- ④ 정부 로드맵(단계적 위임, 자립주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
- ⑤ 유사 보조사업 지방이양 사례(도철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 ⑥ 국토부 매년 추진실적 평가 등 종합관리 체계 이미 마련

개선효과



- 도내 도시재생사업 전국 최다(전국 500여 곳 중 道 67곳) 선정지역으로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 가시적인 성과 도출 및 주민체감 향상 기대
- (현행) 최소 6개월 이상 ⇒ (개선) 최대 1개월 이내 대폭 단축
-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전국 확산을 통해 지방분권 및 지역 주도 발전 선도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10.) 이후, 중앙권한 지방이양 전국 최초 사례

보도자료

관련 기사(발행)

보도자료

2024.7.31 (수) 14:00 유선

과 경 2004-031-0000-5523

행 장 한영환 (031-8300-5573)

담당자 차용현 (031-8300-5574)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향상 기대
경기도 건의했던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29일 지방시대위원회 '도시재생사업 결의안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도시재생사업 결의안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추진요구, 현행에 비해 다양한 변경 사유에 전국 최초로 추진절차 단축 기대

국비 지원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위한 하나의 논점을 넣었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에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피견 청취, 한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은 정부를 통한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일일 처리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반영, 현장 의견 변화 등에 합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2022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시·도 이양

도, 2024년부터 정부에 계속 건의
사업 속도 향상 등 행정 지원 필요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권한 이양은 지방이양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의 '결의안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8월 1일 (목)
이양 권한

경기도는 3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처리 권한이 공역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의 개선 건의 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9일 이양에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보고, 각 부처 의견 조율, 국회 의결 등이다.

권한이 공역단체로 최종 넘어갈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속도감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약 500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도는 권한 이양 확정 시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행정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